

##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이원재 | 희망제작소 소장 (wonjae.lee@makehope.org)

### I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사회 오피니언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인터뷰했으며, 그 전문을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 제시되었다.
-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과 불안, 위험요소가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박정희 모델), ‘시장주도 성장지상주의’(IMF 모델)라는 두 개의 과거가 겹쳐진 결과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첫 번째 과거는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삼았던 국가동원형 성장지상주의 사회, 가부장적 획일주의다. 두 번째 과거는 사회구성원 간 격차가 커지면서 더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 경쟁이 사회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한 모델이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가지 환경은 사라졌고, 그 환경으로 지탱되던 과거 모델의 전략과 목표도 합리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두 개 모델 하의 전략과 목표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남아 있으며, 성장과 공동체의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현재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은 안전한 ‘놀이터’라는 제도적 환경 하에서 개인들이 생존의 위협 없이 창조적인 시도를 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기득권을 뚫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민주적 정치 리더십,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구조적 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사회 곳곳에서 ‘돌러앉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나타나야 한다.
- 가장 현실적인 실천영역은 정치다. 막 문을 연 20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유권자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임박한 선거에서 사회적 타협의 틀을 짤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I 키워드 시대정신, 사회적 타협, 공동체, 지속가능한 삶,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와 데이터 분석의 두 파트로 구성됐다. 인터뷰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운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경제·사회·복지·정치·과학·환경·통일·외교 등 분야 전문가 총 11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갈 경우 5~10년 후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할 일은?''이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인터뷰 전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 제시되었다.

## 1. 과거 : 두 개의 모델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은 한국사회가 겪었던 두 개의 과거가 겹쳐진 결과다. 그중 하나는 박정희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IMF 모델이다.

박정희 모델은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국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국가동원형 제도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삼은 성장지상주의를 지향했다. 이 모델 아래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가부장적 획일주의였다. 위에서 기획하고 결정하면 아래는 모두 다 같이 따라야 하는 사회모델이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개인은 소득증대와 신분상승 기회를 찾아 경쟁했다. 주요한 전략은 지대획득이었다. 국가가 자원 배분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가까이 가야 자원을 배분받아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이때 등장했다. 소 팔아 고시공부시키는 부모들이 흔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개인과 사회는 성장지상주의라는 가치를 공동으로 지향했다. 수출을 늘리면 좋은 것이었고, 월급이 늘어난다면 좋은 것이었다. 그럴 수 있다면 인권과 노동권을 희생해도, 주말과 가족과 일터 안전을 희생해도 괜찮았다. 다른 욕구와 의견은 철저히 차단됐다. 다양성의 가치는 당연히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다양성도 경제적 다양성도 성장지상주의의 제단 앞 제물이 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는 숙청됐고, 노동조합은 탄압받았다. 이런 사회가 기업가에게 요구하는 미덕은 혁신과 모험이 아니었다. 정부의 자원으로 정부의 계획에 잘 맞춰 투자하고 생산하는 순종과 근면만이 미덕이었다.

이 체제가 목표로 삼은 결과는 경제성장률의 극대화였다. 궁극적으로는 국부의 증대가 목적이었다. 나라의 부가 커지면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되리라는 생각이 이 모델을 지탱했다. 동시에 국가가 기획한 가치 아래 획일적으로 순

응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다. 이 체제는 그 자체에 억압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부증대’라는 목표를 향해 사회를 움직이던 지배세력은 ‘성장지상주의’의 힘으로 이 억압을 우회할 수 있었다.

그림 1. 해석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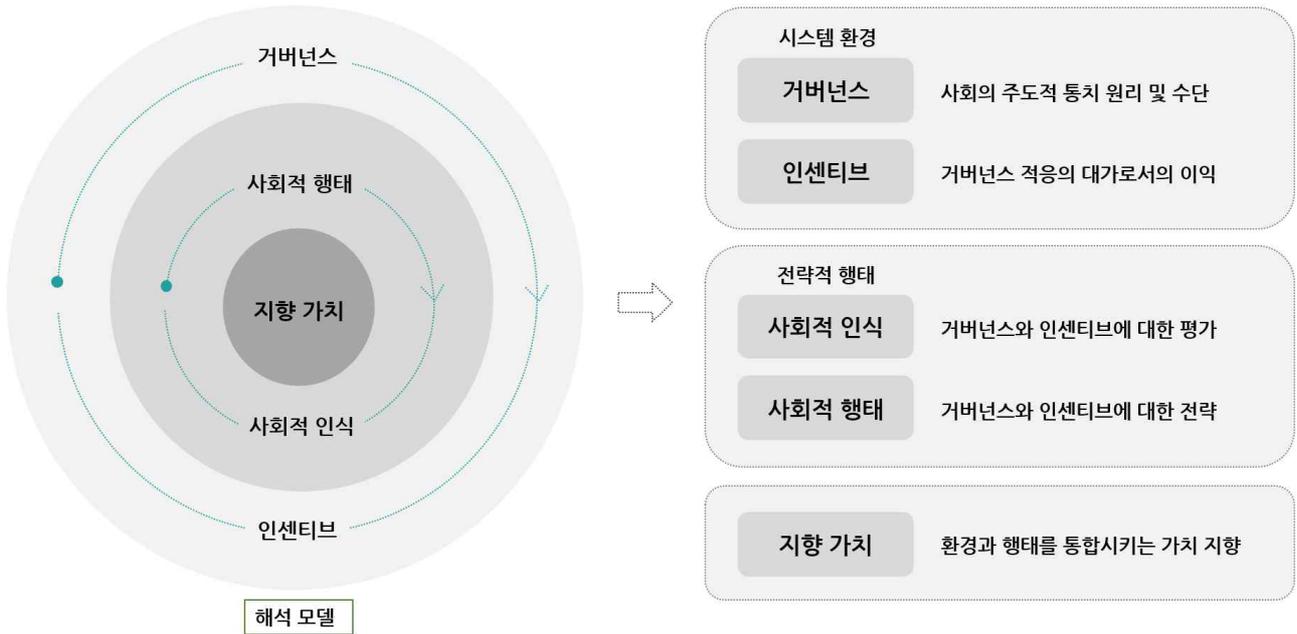


그림 2. 박정희 모델 - 국가주도 성장주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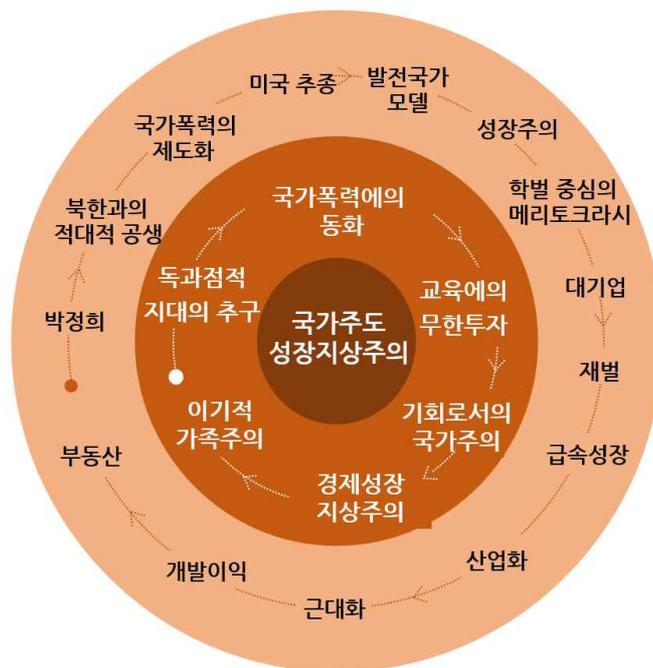


표 1. 국가주도 성장주의 모델의 환경 및 속성

환경	국가동원형 성장주의 사회
사회적 가치	가부장적 획일주의
개인의 전략	지대 획득 통한 소득증대와 신분상승 경쟁
개인의 지향가치	성장지상주의
희생된 가치	다양성
의도된 결과	경제성장률 극대화(국부 증대)
부작용	사회적 억압

IMF 모델은 격차기반 성장지상주의 모델이었다. 시장이 주도하는 격차사회가 이 모델의 제도적 환경이었다. 사회 구성원 간 격차가 커지면 더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경쟁이 사회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개인들이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경쟁력을 높여갈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 역량이 높아지면서 성장하는 결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개인들은 다른 전략을 채택했다. 시장 뒤에 숨어 경쟁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공무원시험 열풍과 자격증 전성시대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격차가 너무 커져 시장에서의 생존조건 확보가 지나치게 위태로워지자, 오히려 지대를 획득해 생존조건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커지기도 했다. 물론 상당수는 시장을 통해 생존조건을 확보하는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림 3. IMF 모델 - 격차기반 성장주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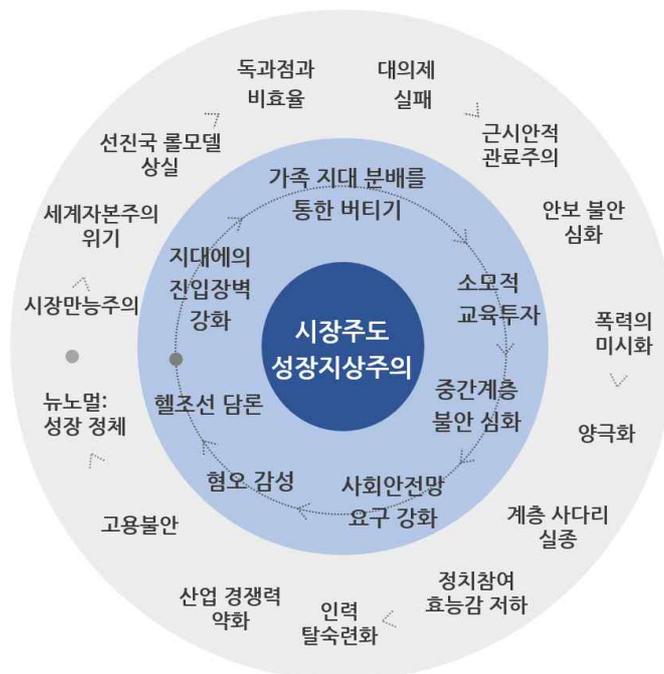


표 2. 격차기반 성장주의 모델의 환경 및 속성

환경	시장주도 격차사회
사회적 가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개인의 전략	지대획득 및 시장경쟁을 통한 생존조건 확보경쟁
개인의 지향가치	각자도생형 성장지상주의
희생된 가치	공동체 정신
의도된 결과	이윤극대화(기업가치 증대)
부작용	내재된 불안

이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도생의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격차기반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는 불필요하다. 혼자 경쟁하는 게 더 가볍고 안전하며 생존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도생형 성장지상주의가 이 사회의 지향가치다. IMF모델은 이윤극대화를 통해 사회를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윤극대화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게 된다는 생각이 전제됐다. 보편적인 경쟁의 규칙 아래 각자 스스로 타자와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동체를 구상했다. 이 체제는 참여자들에게 불안을 줄 수밖에 없었다. 각자도생하다 실패하면 혼자만 죽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실패할 위험을 짊어지게 된 개인들은 상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 2. 중첩된 실패

두 가지 과거 모델은 각각의 시대적 배경이 있다. 박정희 모델은 수출중심의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1960~1970년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세에 얽혀 있었다. 국가가 주도해 수출을 늘리는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가능한 환경이었다. IMF 모델은 1980년대 이후 레이거노믹스<sup>1)</sup>, 대처리즘<sup>2)</sup>, 워싱턴컨센서스<sup>3)</sup>로 이어지면서 세계자본주의를 휩쓸던 시장주도형 성장모델(이른바 신자유주의 모델)의 강화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개방과 경쟁강화 전략으로 효율성을 키워 경제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시기였다.

그 두 가지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라졌다. 그 환경으로 지탱되던 과거 모델의 전략과 목표 또한

- 1)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재임 1981~1989)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 이 말은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 2)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대처 수상(1979~1990)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칭.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 수장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즘(monetarism)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한다.
- 3)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발전 모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제시했던 미국식 경제체제의 대외확산전략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 탈규제를 통한 무한경쟁과 정부의 긴축재정, 민영화 및 정부개입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모델이 제시하던 전략과 목표는 여전히 한국사회 현재 안에 남아 있고, 사회의 전략과 목표가 시대와 맞지 않아 비껴거리다. 두 모델이 원래 의도하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한국사회는 '성장의 실패'와 '공동체의 실패'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

먼저, 두 모델은 현재 한국경제에서 '성장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박정희 모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특권층을 만들어 냈고, 특권층은 획일주의를 통해 사회를 지배하며 지대를 획득하려는 경향을 띠게 됐다. 이런 경향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기반인 창의성을 억압한다. 창의성이 점점 더 중요한 성장의 요인이 되어가는 시대가 오면서 이 모델은 원래 의도했던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도리어 성장을 억눌러 '성장 정체'를 가져오고 경제의 구조적 부실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과정은 박정희 모델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IMF 모델은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했으나, 지나친 생존경쟁이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면서 경쟁해서 승자가 되면 경쟁하지 않게 되는 '경쟁의 역설'을 불러오게 된다. 승자독식은 격차를 키웠을 뿐 아니라 고착화시키기도 한다.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기 어려운 재벌중심 경제체제와 극심한 원·하청 갑을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등이 그 결과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는 '성장 정체'로 이어진다.

두 모델은 현재 한국경제에서 '공동체의 실패' 원인도 제공하고 있다. 박정희 모델에는 획일주의와 가부장적 서열 구조가 전제되며, 이질성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와 관리의 대상이다. 사회다양성이 커질수록 이 모델은 위태로워지고, 공동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IMF 모델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생존경쟁으로 밀어 넣었다. IMF 모델의 각자도생 전략은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파괴한다. 전제조건이어야 할 '공정한 경쟁'의 규칙은, 지나친 승자독식 구조가 이어지면서 사라지고 만다. 공동체가 지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 없어진 것이다.

### 3. 미래를 향해

현재 한국사회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방향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모델과 IMF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운용 모델이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와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된 새로운 모델을 우리는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이라고 부른다. 현재 시효가 지난 국가주도형, 실패한 시장주도형 모델을 넘어 민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성장지상주의를 넘어 경제성장 이외의 다른 가치를 포괄하는 발전모델이다. 개인은 이 안에서 각자도생 및 지대획득의 노력 대신 창조적 모험과 협력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4.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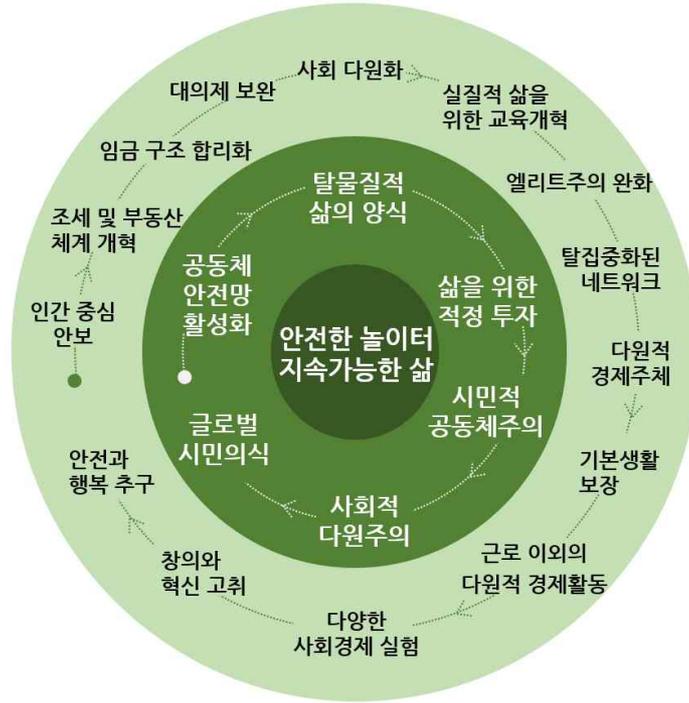


표 3.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의 환경 및 속성

환경	안전한 '놀이터'
사회적 가치	다양성의 포용
개인의 전략	창의성을 극대화한 활동/협력을 통한 공동체 회복
개인의 지향가치	적정한/지속가능한 삶
희생될 수 있는 가치	양적 성장 속도
의도된 결과	지속가능성 극대화 (공동체 활력 증대)

### 3-1. 환경: 안전한 놀이터

이 새로운 모델의 환경은 '안전한 놀이터'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참여자들이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안전하다는 '놀이터'의 의미와 약속이 담겨있다. 무엇을 시도하든 실패해도 생존에 위협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러한 환경은 특히 다음세대가 맞을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필요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런 환경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운영관) “신자유주의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정의

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1970년대~80년대처럼 국가가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국가가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고 열심히 그 안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현재) “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중략)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조한혜정)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한다.”

이를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강화** : 시장에서 실패해 바깥으로 밀려나더라도 재기할 시간을 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참여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
- **기본생활 보장 강화** :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최후의 안전망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회참여자들이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과 무한경쟁 대신 다른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 **교육·보육 등 육아비용 절감** :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한다. 생산활동을 감당하고 사회 역동성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임금차별 해소** : 노동시장 내에서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대획득을 위한 경쟁을 멈추게 된다.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장하성) “기업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기업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개입한다. (중략)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 역할이란 게 바로 그런 거다. 내버려 두고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작동 안 하거나 시장이 작동한 결과가 우리사회나 국민이 원하는 결과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게 당연하다. (중략) 1997년에 (정부가) 기업에 개입해서 150조 원 이상을 써서 구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어려워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분배정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조정정책에도 개입을 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윤영관) “학생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지만 굶어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한다. 현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생들이 공무원시험, 로스쿨, 의대로 몰려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새로운 걸 하다가 실패해도 최소 2년은 소득의 70%는 보장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그 길로 안 가겠나. 사회가 안정되고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시스템이다.”

(이정동) “많은 기업에서 사장님들이 퍼스트 무버<sup>4)</sup>가 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1년 안에 실수 없이 퍼스트 무버가 되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산업이 퍼스트 무버로 움직여가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다. 퍼스트 무버가 된다는 건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다는 것을 뜻한다. 주춤거리고 더듬거리고 때때로 돌부리에 채이

4) first mover; 신사업 개척자;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 또는 기업을 일컫는 패스트 팔로어 (fast follower)와 달리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를 말한다.

고 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그 전체를 빼고 얘기하니깐 사람들이 공허한 메시지만 늘어놓는다고 느낀다.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선진기업들이 많이 모인 글로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시행착오를 무수히 접한 곳이다. 픽사도, 스페이스엑스도, 테슬라도 그렇다.”

(장덕진) "복지 지출은 그 규모보다 '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하다. 일본처럼 연금과 의료 복지에 쓴다면 그냥 사라지는 돈일뿐이다. 노동과 가족에 쓰면 출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20년만 기다리면 다시 세수가 늘어난다."

### 3-2. 사회적 가치: 다양성의 포용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은 획일성과 효율성을 넘어선 '다양성의 포용'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놀이터에서는 다른 이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이보다 더 빠르고 더 커야 한다며 동일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지도 않는다.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목적이 어우러지면서 그 전체를 포용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 가치로 제시한다.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정재승)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성 존중의 문화가 부족하고 획일화되어 있는 가치관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봐도 하나의 시스템이 환경적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진화해 가야 한다. 우리사회는 언젠가부터 다양성보다 더 강력한 국가적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다양성이 희생되고 그게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 3-3. 개인의 전략: 창조적 실험 · 대화와 협력

다양성이 포용되는 '안전한 놀이터'에서 개인들은 두 가지 형태- '창조적 실험'과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적 실험이란 다시 말해 '매우 새로운 실험'이다. 엉뚱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현해보는 전략이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모델의 획일주의적 '일사불란' 생산전략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이 전략은 누군가 뛰어난 한 사람이 해법을 제시하고 모두가 따르는 방식의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대화와 협력은 다시 말해 '둘러앉아 이야기하기'이다. 과거의 '복종과 순응' 전략과 '각자도생' 전략은 한국사회 합의구조를 깨뜨렸다. 순응 전략 아래서도 각자도생 전략 아래서도 수평적인 대화와 협력은 무용하다. 시키는 대로 하거나 개인(나) 혼자 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이 과정을 통해 협력구조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양성이 포용되는 안전한 놀이터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이정동)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외통수다. 시행착오를 범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 비즈니스를 뜯어먹는 건 안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적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이런 거는 (결국 기존 비즈니스를) 뜯어먹는 거다. 지금 딥마인드<sup>5)</sup>처럼 없는 걸 만들어야지... (시행착오 적은

5) 구글 딥마인드; Google DeepMind; 구글의 자회사이자 영국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다. 2010년에 데미스 허사비스가 영국 런던에서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고, 2014년에 구글이 4억 달러에 인수하여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개발하였고 알파고가 대한민국의 프로 바둑기

비즈니스는) 치킨집하고 똑같다.”

(박상훈) “시민의 이름이 여러 개여야 한다. 무정형적인 시민참여가 아니라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좋아져야 한다. 지역으로는 마을 단위든 구 단위든 다른 차원에서는 자영업자든 비정규직이든 결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많은 경우 민주주의를 비교할 때 각 나라의 결사체적인 기반이 어떤가가 중요하다. 웬만한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고 노동자기도 하고 우리 마을 환경 지킴이 모임도 하고 교통도 스스로 관리하고, 공동체 내용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다양한 결사체들이 시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한혜정) “한 명만 ‘아, 아니잖아’ 하면 의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때까지 다시 토론한다... 인간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하면 바로 그거다. 그게 되는 사회인가를 봐야 한다.”

### 3-4. 개인의 지향가치: 지속가능한 삶

새로운 모델 아래서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는 ‘지속가능한 삶’으로 수렴될 수 있다. 소득을 극대화해서 자산을 축적하며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한국인의 평균적 지향가치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당한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생존하며,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하는 삶이 평균적 한국인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16년간의 학교 교육을 통해 노동할 준비를 한 뒤, 주 5일 48시간 30년을 조직과 운명을 같이하며 살아가다가,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은퇴해 ‘여생’을 보내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애시계는 어차피 불가능해졌다. 노동하는 시간과 노동하지 않는 시간 사이의 경계는 점점 불명확해지고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도 늘어난다. 비영리활동, 사회적경제 활동, 기부·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삶에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조직적 생산에 투입해 규율에 맞춰 살아가면서 소득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올바른 시민’이라는 가치는 점점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신 조직적 생산과 자족적 생산,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삶, 그런 걱정하며 지속가능한 삶이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삶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도 필요해진다.

공동체 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 속 개인의 지향가치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조한혜정)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다.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한다.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윤순진) “에너지 소비, 나아가서 물질적인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구 전체 생태용량의 1.5배를 쓰고 있다. 미래세대가 쓸 것까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다. 심지어 ‘인류세(Anthropocene)’<sup>6)</sup>라는 표현도 있다. 이 시대가 지질시대로 치면 신생대 제4기 ‘충적세’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멈출 때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인정해야 한다.”

사 이세대들 9단과 대국이 성사되면서 많이 알려졌다.

6) Anthropocene: 人類世; 네덜란드 화학자 크뤼첸(Paul Crutzen; 1995 노벨화학상)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로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환경체계는 급격히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를 뜻한다. 시대 순으로는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지질시대 최후의 시대이자 현재인 충적세에 이은 것이다.

### 3-5. 희생될 수도 있는 가치

새로운 모델 아래서는 양적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회통념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과 성장을 사회적 가치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과거 모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성장은 여러 가지 가치들과 병렬적으로 놓이는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 3-6. 의도된 결과: 지속가능성 극대화

이 모델이 의도하는 결과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성장과 효율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 성과물로 여겨지겠지만, 이제 그 지위가 바뀌어 지속가능성의 하위 범주로 흡수된다. 또한 성장도 효율성의 용법은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이나 비용절감을 넘어서서,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등으로 변화한다.

지속가능성의 극대화는 공동체의 활력을 높인다. 지금까지의 획일적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는 마치 범죄처럼 여겨져 왔다. 격차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는 곧 파멸의 지름길로 여겨졌다. 하지만 ‘안전한 놀이터’에서 ‘새로운 시도’는 ‘즐거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지고 권장될 것이다. 대화와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해지고 권장 받게 된다. 따라서 활동 측면에서도 지식교류 측면에서도, 공동체의 활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모델의 환경은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구조의 두 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다. 새로운 모델의 거버넌스는 먼저 ‘안보’로부터 시작한다. 큰 틀에서 우리 삶을 규정하는 국가안보 수준에서의 평화체제 확보는 그 출발점이 되지만, 안보 개념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안보’로 보고, 국토안보 · 사회안보 · 경제안보의 세 기둥을 모두 안보로 포괄하고 있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는 그래서 확장된 안보인 ‘인간 중심 안보’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1) 조세 및 부동산 체계 · 임금 구조는 사회 참여자들이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2)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대의제가 보완되어야 하며, 보완된 대의제는 다시 다양성이 확장되면서도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3) 교육의 변화는 엘리트주의 완화와 사회의 탈집중화를 불러와야 하며, 이는 다원적 경제주체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된다.

새로운 모델의 인센티브 구조는 ‘안전한 놀이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 아래서는 ‘직업’과 ‘근로’의 개념이 바뀌면서, 전통적 경제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경제 실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각자도생의 경쟁을 벌이거나 권위에 순종하며 시대획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환경 아래서는 사람들의 행태와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국가에 무작정 기대지 않고 공동체 스스로 안전망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다. 삶의 양식은 좀 더 탈물질적이 되며, 과거 사교육 과잉투자 등 무한 경쟁을 위한 무한투자를 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삶을 위한 적정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 안에서는 시민적 공동체주의와 사회적 다원주의가 사람들의 주된 인식체계가 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의 경계를 넘는 글로벌 시민의식까지 가질 수 있다. 단순히 당위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이니, 보편적 인식체계가 좀 더 쉽게 변

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4. 무엇을 할 것인가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통해 두 가지의 시급한 과제가 제시됐다.

하나는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낼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이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변화 아이디어는 이미 많은 부분 나와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에 이런 변화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정치의 역할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다.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체득하고 있는 리더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리더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이 중요하고 혁신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한국사회 대다수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런 리더와 정치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이다. 많은 경우 정치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이고, 복지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복지 수혜자들일 때가 많다. 시민들이 주체를 형성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여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나와야 한다. 마을공동체일 수도 있고, 학부모나 노동자 같은 이해관계자 조직일 수도 있고, 취미와 관심사 모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실천이 어떻게 기획되어야 할까? 정치 영역에서 이는 명백하다. 막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임박한 선거에서 사회적 타협의 틀을 짤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단지마다 학교마다 농촌 마을마다 취미활동과 정치활동 모임마다 제대로 의논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 국가 의제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이성적으로 토론되며 차례로 관철되고 타협되고 뭉쳐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장덕진)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틀을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7~8년 안에, 이번 또는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장기적인 문제에 손을 댈 수 있다. (중략) 다음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타협의 틀을 만들고,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합의 후에 따르지 않는 주체는 공공의 영역에 다시는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낸다면... 당장의 영웅은 안 될지라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경직화 및 갈등의 확대 속도를 볼 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게 ‘시대정신을 묻는다’에서 만난 인터뷰 대상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는 현재, 한국사회는 시민에게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인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은 적정한 선 안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지향하며 시급한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